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가상 작성 예시 - 휴대폰용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와 **어느 청구항목에 이의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아래 날짜·금액·이름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송달기록과 법원의 기간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법원의 공식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가상 사건과 이의 범위

채권자 김가람은 채무자 이다온에게 대여금 원금 10,0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김가람은 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다온은 2026년 9월 24일 정본을 송달받았고 그 전에 원금 중 4,000,000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변제 여부는 아직 판단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원금 4,000,000원 부분에만 이의**한다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원금 6,000,000원 부분은 이 예시에서 이의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명령에 이자·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이 있다면 각 항목을 이의 범위에 넣을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기간이 지나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주장과 다르게 일부만 이의하지 마십시오.

가상 이의신청서 기재 예시

사건
가상 기재 또는 실제 사건 확인사항: ○○지방법원 20XX차전○○○○○. 실제 정본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채권자
가상 기재 또는 실제 사건 확인사항: 김가람(가상 인물).

채무자·주소
가상 기재 또는 실제 사건 확인사항: 이다온(가상 인물). 실제 제출 시 본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송달받은 날
가상 기재 또는 실제 사건 확인사항: 2026년 9월 24일(가상). 실제 정본과 법원 송달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제출일·연락처
가상 기재 또는 실제 사건 확인사항: 실제 작성·제출일과 본인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의신청 문구 - 일부 이의를 선택한 경우

채무자는 위 사건의 지급명령 중 **청구 원금 10,000,000원 가운데 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나머지 원금 6,000,000원 부분은 이 예시에서 이의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본에 다른 청구항목이 있다면 각 항목의 이의 범위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 공개 이의신청서 양식에는 송달일을 적고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일반 문장이 있습니다. **이 예시처럼 일부만 이의하려면 위 일반 문장만 옮겨 적지 말고 다투는 원금·이자·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부에 이의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일부이의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이의 이유 - 선택적 설명 예시

이다온은 위 4,0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송금기록·영수증·정산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서에 한 줄로 이유를 적었다고 후속 소송에서 할 주장과 입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주 이의기간 안에 이의 의사와 범위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공개 이의신청서의 유의사항은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신청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30일을 일반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꿔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송달기록과 법원의 후속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제출법원: 위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귀중

이의신청인(채무자): 실제 제출인의 서명 또는 날인 등 제출 방식에 맞게 확인

제출 전 확인표

정본 송달일·이의신청 기간
대조 자료: 지급명령 정본·법원 송달기록
결과: □ 확인 □ 미확인

전부 또는 일부 이의
대조 자료: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이 표시된 정본
결과: □ 범위 특정 □ 다시 검토

변제 주장 금액
대조 자료: 계좌이체확인서·영수증·정산 합의
결과: □ 확인 □ 자료 부족

사건번호·제출법원·연락처
대조 자료: 정본·전자소송 사건정보·법원 양식
결과: □ 일치 □ 수정 필요

후속 소송의 주장과 증거
대조 자료: 차용증·변제내역·상대방 주장
결과: □ 정리 □ 추가 필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의 신청 자체로 다툰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이의의 범위와 부대청구가 얽힌 실제 사건은 지급명령 정본과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개 댓글이나 공유 문서에 실제 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 전체 번호를 적지 마십시오.

공식 근거와 자세한 설명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제2항·제474조 (law.go.kr)
-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개 HWP(법원 자료실 749번) (jifi.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안내 (www.scourt.go.kr)
- 이안법무사사무소,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ianlaw.co.kr)

이 자료는 설명용 **가상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정본의 송달일·청구 범위·양식과 제출방법을 확인한 뒤 자신의 사건에 맞게 작성하십시오.